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김 승 권*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우려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의 올바른 인식과 철저한 원인규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 변화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변화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자녀출산의 변화를 결혼상태 변화와 유배우부인의 출산율 변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출산율 저하는 유배우 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혼자의 결혼연장 또는 독신생활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요인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경기침체 및 직장불안정, 결혼가치관의 변화와 초혼연령의 상승, 자녀양육 관심증대, 자녀양육비 부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여성의 자아육구 및 사회참여 증대, 자녀효용 가치 감소, 이혼 등 가족해체의 증대, 그리고 불임부부의 증대 등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출산율 변화를 전망해 보면, 저출산율 일찍 경험한 서구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어 선진국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더군다나 젊은 미혼남녀의 가치관이 개인주의화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산율 회복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년간 실시된 각종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경기침체가 회복될 경우 약 20%의 출산율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의 합계출산율은 약 1.43명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종합적, 체계적 출산회복정책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약 10년 후에는 합계출산율이 약 1.6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가져본다. 그렇지만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 회복수준은 현저하게 상이할 것이다.

핵심단어: 출산율, 자녀출산, 인구노령화, 인구규모, 인구구조

I. 서론

인구는 한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양(量)과 질(質)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연구위원

양 측면에서 인구는 국가발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사회존속의 보장 여부를 결정짓는 지표이기도 하다. 먼저 양적 측면을 검토해 보면, 현재 한국의 인구는 약 4,8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에서든 높은 인구밀도, 복잡한 교통, 확산되는 환경오염, 높은 주거비 등을 감안하면 ‘인구가 너무 많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 다음으로 인구의 양적 측면보다 중요한 질적 측면을 검토해 보면, 부존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인구의 질적 측면, 즉 자질향상은 국가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과 근면성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정도로 우수한 인구자질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구자질이 더욱 향상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매 20~30년마다 약 1,000만 명의 인구가 감소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현재의 경제규모와 경제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인구자질과 산업기술이 더욱 향상된다면 인구감소의 충격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빠른 속도의 인구감소가 선행되고 인구자질과 산업기술의 향상이 시차(time lag)를 두고 뒤에 이루어진다면 2만 불 달성은 커녕 경기후퇴, 더 나아가서는 경제파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많은 국민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전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출산을 저하와 이로 인한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변동의 문제는 ‘변화의 속도’에서 기인되는 것이라 하겠다. 빠른 속도의 출산율의 저하, 세계에서든 가장 낮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인구의 빠른 양적 감소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인구고령화는 그 어느 사회보다도 심각한 현상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¹⁾ 정부는 많은 논쟁을 거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결정하였으며,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대통령 정책실에 「인구고령사회 task force team」을 두었으며,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2004년 2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가정심의관실을, 그 소속으로 인구가정정책과를 두고 정책개발 및 추진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저출산 현상

1) 저출산은 인구고령화를 유발하여 많은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며, 특히 우리 사회와 같이 진행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역동성이 떨어지고 경제가 침체되어 국가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의 올바른 인식과 철저한 원인규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 변화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변화방향을 전망해 본다.

II. 출산수준관련 지표의 변화추이

1. 연령별 출산율에 의한 합계출산율의 변화양상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는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산업화와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1983년에는 인구의 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인 2.1명에 도달하였고, 1987년에는 1.6명 수준까지 낮아졌다. 1999년에는 1.42명으로 대폭 낮아진 합계출산율이 2000년에는 1.47명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1년에는 1.30명 수준으로 세계에서 낮은 위치에 머물렀으며, 그 이후 다시 저하하여 2002년에 1.17명, 2003년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표 1> 참조).

이와 같은 출산수준은 저출산 현상을 일찍 경험한 프랑스(1.89), 영국(1.64), 스웨덴(1.54), 캐나다(1.55), 독일(1.34), 일본(1.33)의 합계출산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우리 사회에 주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고 하겠다.²⁾

<표 1> 합계출산율의 변화

(단위: 여자 1인당 명)

연령	1960 ¹⁾	1974 ¹⁾	1983 ²⁾	1987 ³⁾	1990 ⁴⁾	1996 ⁵⁾	1999 ⁶⁾	2000 ²⁾	2001 ²⁾	2002 ²⁾	2003 ²⁾
합계출산율	6.0	3.6	2.1	1.6	1.6	1.71	1.42	1.47	1.30	1.17	1.19

자료: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가족계획연구원 (1997),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

2) 통계청, 연도별 자료, 《인구동태통계연보》

3) 문현상 (1988)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4) 공세권 외 (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조남훈 외 (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김승권 외 (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외국의 출산율은 2001년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2. 연령별 출산율에 의한 합계출산율의 한계점과 희망 합계출산율³⁾

결혼연령의 변화가 계속되는 과정에서는 연령별 출산율 또한 큰 폭으로 변화하고, 따라서 연령별 출산율을 토대로 한 기간합계출산율(Period Total Fertility Rate)은 장래 출산율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은 최근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다.(Feeney & Yu 1987; Bongaarts 2001). 이에 따라 연령별 출산율에 의거하지 않는 합계출산율 계산방법이 제시되었다. Feeney 등은 기간별, 출생순위별 출산율을 이용하는 PPPR(Period Parity Progression Rate)에 의거한 총출산율(PPPR-TFR)을 제시하였고, Bongaarts는 출산의 속도효과를 제거한 수정 합계출산율(Adjusted TFR)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합계출산율은 여성의 평생 출산율을 추정하는 것으로 시기적 출산율이나 시기적 출생아수를 추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결혼연령 변화가 안정된 후의 합계출산율 추정으로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산된 합계출산율은 기간 합계출산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전광희, 2002; Han & Feeney, 1993).

Feeney의 출생순위별 출산율을 토대로 한 PPPR-TFR을 약간 수정하여 출생순위별 희망출산율에 기초한 희망합계출산율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있다.(Kulkarni & Choe, 1998; Tsuya & Choe, 2003). 이 방법은 여성의 현재 총출생아수 별로 추가자녀를 희망하는 부인의 비율(희망자녀의 수와 관계없이)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출산율 추산을 현실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1994년, 1997년, 2000년 실태조사에서의 추가자녀 희망률에 의거하여 희망 합계출산율을 산출하였는데, 우리나라 부인의 희망 합계출산율은 가까운 장래의 시기 합계출산율을 비교적 정확히 추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 조절이 추가자녀 희망여부와 거의 일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인의 희망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훨씬 밑돌고 있는데 이의 가장 큰 원인은 한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들 중에 추가자녀 희망률이 약 60%, 또는 그 이하의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승권 외, 2000; 조남훈 외, 1997; 홍문식 외, 1994).

3) 이는 김승권 외 (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법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중 김민자·김승권, 「출산수준 결정요인의 분석 및 정책방안」에서 발췌한 것이다.

〈표 2〉 기간 합계출산력(period TFR)과 희망 합계출산력(desired TFR)의 추이
(단위: 여자 1인당 명)

구분	1993	1994+	1996	1997+	1999	2000+
기간합계출산력	1.75	-	1.71	-	1.425	-
희망합계출산력	-	1.67	-	1.54	-	1.59

3. 출생아동 규모의 변화

출생아동수는 가임여성인구(일반적으로 15~49세) 규모의 영향을 받지만 이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출산율 저하의 결과는 출생아수 감소로 나타난다. 그리고 출산율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가임여성인구의 규모가 감소한다면 그 결과는 출생아수 감소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가임여성인구 규모와 출산율이 상호작용하여 출생아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합계출산율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지표는 출생아수의 변화이다.4) 1970년 100만 7천명이던 출생아가 2003년에는 49만 3천 5백 명으로 사상 유례 없이 적었다. 동 기간 중 1일 평균 신생아수가 2,759명에서 1,352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더군다나 2003년부터는 가임여성 집단이 감소되기 시작하여 출산율이 현저하게 반전(反轉)되지 않는 한 출생아수의 감소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표 3〉 출생아 규모 변동추이(1970~2003년)

	1970	2000	2001	2002	2003
출생아수(천명)	1,007천명	636.8천명	557.2천명	494.6천명	493.5천명
1일 평균	2,759명	1,745명	1,527명	1,355명	1,352명

자료: 통계청, 연도별 자료, 〈인구동태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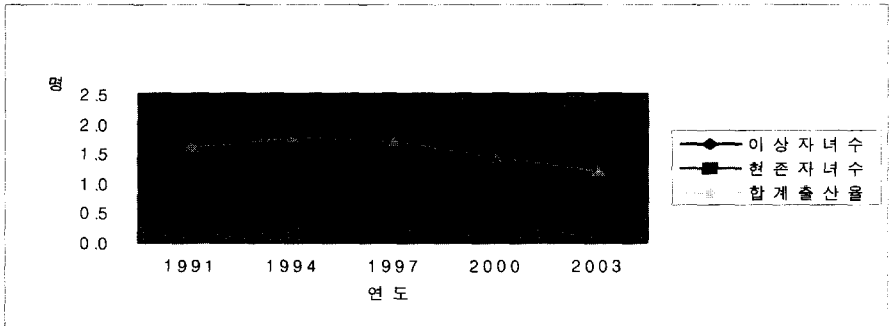
4. 이상자녀수, 현존자녀수, 합계출산율의 변화 논의

이상자녀수, 현존자녀수, 합계출산율 등의 변화추이를 1990년대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과 이상자녀수는 반비례하는 측면이 있으나5) 1990년대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또한 이상자녀수

4) 출생아 중 여아는 재생산력을 가지므로 성장하여 약 30년 후(현재 평균초혼연령에 의하면 약 27~29년이 됨)에는 출산을 하게 된다.

5) 높은 출산수준을 보이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출산율이 이상자녀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반면에 안정

가 많아짐에 따라 현존자녀수가 증가하는 경향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존자녀수는 감소하거나 동일한 현상을 보였다.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발생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및 정서적 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부인의 개인적 및 가족의 환경변화가 이상자녀수에 대한 부인의 가치관과 출산행위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된다(김승권, 2001).



〈그림 1〉 15~44세 기혼부인의 평균 이상자녀수, 평균 현존자녀수 및 합계출산율의 변동추이(1991~2003년)

Ⅲ. 출산율 변화의 원인

1. 통계학적 측면의 출산율 변화원인

자녀출산의 변화를 결혼상태 변화와 유배우부인의 출산율 변화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출산이 혼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Kitagawa(1955)와 Retherford & Ogawa(1978)가 제시한 방법에 의하여 두 연도 사이의 총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율, 연령별 평균 출산율, 연령별 평균 유배우율 등에 의한 합계출산율 변화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요약된다. 이중 첫 부분은 결혼연령 변화의 기여로, 둘째 부분은 유배

된 낮은 출산율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상자녀수가 출산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김승권, 2001).

우부인의 출산을 변화의 기여로 해석할 수 있다.

$$\Delta TFR = \sum_a (\Delta Ma * \text{mean}(Fa)) + \sum_a (\text{mean}(Ma) * \Delta Fa)$$

- 총출산력 변화: ΔTFR
- 연령별 출산력 변화: ΔFa
- 연령별 유배우율 변화: ΔMa
- 연령별 평균 출산력: $\text{mean}(Fa)$
- 연령별 평균 유배우율: $\text{mean}(Ma)$

<표 4>는 이와 같은 방법에 기초하고 통계청의 인구주택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1959~1999년 사이의 출산력 변화를 매 10년 간격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승권 외, 2003).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결혼연령 변화가 합계출산율에 기여하는 비중은 1959~1969년 기간에는 10%이던 것이, 1970년대는 15%, 1980년대는 39%, 그리고 1990년대는 무려 95%나 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결혼연령 연장이 출산율저하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결혼연령 연장과는 반대로 유배우출산력이 합계출산율에 기여하는 비중이 1959~1969년 기간에는 90%나 되었으나, 1970년대는 85%, 1980년대는 61%로 점차 낮아지더니 1990년대는 -9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6) 결혼연령의 연장과 유배우 출산력의 저하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의 출산율 저하가 유배우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혼자의 결혼연장 또는 독신생활의 증대에서 기인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6) 여기서 -95%의 의미는 만일 결혼연령의 변화가 없었다면 합계출산율은 반대방향인 +95%로 변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1989년의 1.6수준에서 1999년의 1.42 수준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0.18 하락), 오히려 1.77의 수준으로 상승했을 것이며(0.18×0.95=0.17; 1.60+0.17=1.77), 미혼율의 증가는 이러한 변화를 상쇄하고 그 이상으로 총출산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의미이다.

〈표 4〉 1959~1999년 기간의 합계출산율 감소 요인 분석

(단위: %)

연도	합계출산율 저하에 대한 기여율		
	결혼연령연장	유배우 출산율 저하	계
1959~1969년	10	90	100
1970~1979년	15	85	100
1980~1989년	39	61	100
1990~1999년	195	-95	100

주: 1) 1959, 1969, 1979, 1989년 연령별 출산력: 인구주택 총조사 10% 원자료를 이용한 own-children method (Cho, Retherford, & Choe, 1986)에 의한 추산임.

2) 1959, 1969, 1979, 1989년 연령별 유배우율: 1960, 1970, 1980, 1990, 2000년 연령별 유배우율에 의한 linear interpolation 결과임.

자료: 김승권 외 (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미혼율의 증대

여성의 결혼연령은 계속하여 상승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미혼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25~29세 연령층의 미혼율은 1970년 10%에서 2000년에는 40%로 증가하였고, 30~34세 연령층에서는 1970년 1%에서 2000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에 남성의 미혼율은 25~29세 연령층이 43%에서 71%로 증가하였고, 30~34세 연령층은 6%에서 28%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출산 적정연령기간의 많은 부분을 미혼상태에서 보내고 있고, 이러한 결혼연령의 상승이 출산력 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5〉 미혼율의 변화

(단위: %)

연령	1970	1980	1990	2000
여자				
20~24세	57	66	81	89
25~29세	10	14	22	40
30~34세	1	3	5	11
남자				
20~24세	93	93	96	98
25~29세	43	45	57	71
30~34세	6	7	14	28
35~39세	1	2	4	11

자료: 통계청, 연도별 자료, 《한국인구총조사 보고서》

2) 기혼부인의 자발적·비자발적 소자녀 선호

1960~1999년의 유배우부인의 출산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1980년 기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하락 경향을 보였지만 1990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상승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결혼지연 현상으로 출산율은 작은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합계출산율이 급격한 저하를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기혼여성의 출산율 변화는 큰 폭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적 가치관의 만연,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의 증대, 자녀양육 부담 증대 등이 현실적으로 기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남녀가 결혼하면 약 2명 전후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유배우 부인의 연령별 출산율

(단위: 부인 1,000명당 명)

연령	1960	1970	1980	1990	1993	1996	1999
20~24세	447	450	458	306	320	377	386
25~29세	351	356	292	234	237	264	224
30~34세	298	223	103	53	65	88	86
35~39세	232	122	28	7	15	11	14
40~44세	117	53	7	1	1	4	4
45~49세	22	8	1	0	0	0	0

자료: 김승권 외 (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와 같은 판단은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에서도 잘 나타난다. 과거년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감소하고, 1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렇지만 2003년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1.78명으로 1994년 및 1997년의 1.8명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2000년보다는 다소 상승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기혼부부들은 평균 2명에 약간 못 미치는 일정규모의 자녀를 가지며, 이러한 수준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의 출산율 저하원인을 기혼층에서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1994~200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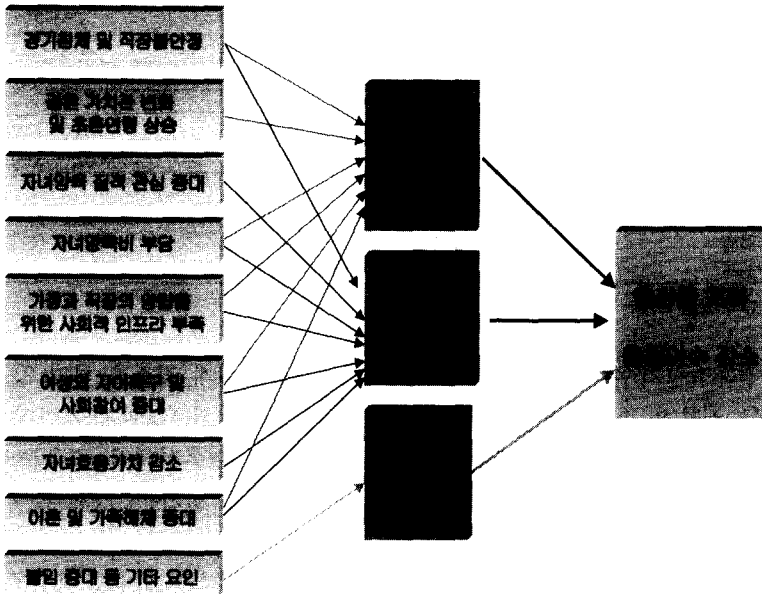
연도	1명 이하	2명	3명 이상	계(수)	평균자녀수
1994 ¹⁾	31.6	53.3	15.1	100.0(5,183)	1.8
1997 ²⁾	29.3	58.3	12.4	100.0(5,419)	1.8
2000 ³⁾	31.7	57.4	10.9	100.0(6,404)	1.7
2003 ⁴⁾	27.4	60.6	12.0	100.0(6,600)	1.78

자료: 1) 홍문식 외 (1994)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조남훈 외 (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 (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 (2003b),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 출산율의 통계학적 변화원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전술한 출산율 변화의 통계학적 원인과 선행연구(김승권 외, 2002; 2003) 결과에 의하면, 출산율 저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통계학적 원인인 미혼율 증대와 유배우 출산율의 저하는 만혼 및 결혼기피, 출산기피, 그리고 출산불가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의 출현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 중 우리 사회에 뚜렷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그림 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크게 아홉 가지로 분류된다(김승권 외, 2004). 즉, 경기침체 및 직장불안정, 결혼가치관의 변화와 초혼연령의 상승, 자녀양육 관심증대, 자녀양육비 부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여성의 자아육구 및 사회참여 증대, 자녀효용가치 감소, 이혼 등 가족해체의 증대, 그리고 불임부부의 증대 등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다.)

7) 이 글에서 제시하는 것은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인 중 일부분에 불과하며,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주요 요인이라 판단되는 것만을 제시한다.



〈그림 2〉 출산율 저하의 과정

1) 경기침체 및 직장불안정

28~34세의 미혼남녀 1,1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미혼상태가 ‘비자발적’이라고 한 경우는 46.3%나 되었으며, ‘일시적(곧 결혼예정)’인 경우는 16.6%, ‘자발적’인 경우는 37.1%로 나타났다. 비자발적으로 평균 결혼연령을 넘긴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결혼을 원하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결혼을 미루거나 계획이 아직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 미혼상태인 경우는 여자(51.8%)가 남자(30.4%)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결혼에 대한 가치부여를 낮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8〉 28세 이상 미혼남녀의 특성별 '현 미혼상태가 자발적인지의 여부'(2003년)
(단위: %, 명)

특성	자발적	비자발적	일시적 (곧 결혼예정)	계(수)
전체	37.1	46.3	16.6	100.0(1,134)
성				
남자	30.4	51.1	18.5	100.0(779)
여자	51.8	35.8	12.4	100.0(355)
연령				
28~29세	37.8	42.1	20.1	100.0(397)
30~34세	32.9	51.1	16.0	100.0(562)
35~39세	49.1	40.6	10.3	100.0(175)

자료: 〈표 4〉와 동일.

28세 결혼적령기 현재 미혼상태에 있는 남녀들에게 현재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마땅한 배우자가 없어서'(58.7%)와 '경제적 기반이 없어서'(25.6%)가 가장 높았다. 마땅한 배우자가 없어서 미혼상태인 경우는 여자(67.9%)가 남자(54.8%)보다 13.1%포인트 높았다. 특히 남자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서 현재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여자보다 약 5배나 높아 경기침체 및 청년실업이 결혼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남자 28.4%, 여자 6.0%).

또한 독신을 선호하기 때문에 미혼상태에 있는 경우는 여자(13.2%)가 남자(5.4%)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과 비례하였는데, 특히 35~39세 25.9%, 30~34세 6.1%, 28~29세 2.7%로 연령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표 9〉 28세 이상 미혼남녀의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주요 이유'(2003년)
(단위: %, 명)

특성	학업 때문	나이가 어려	마땅한 배우자가 없어서	계속 취업원함	경제적 기반 없어서	독신 선호	기타 ²⁾	계(수)	χ^2 (df.)
전체	4.8	0.9	58.7	0.6	21.7	7.7	5.6	100.0(1,065)	
성									
남자	4.6	1.1	54.8	-	28.4	5.4	5.7	100.0(747)	97.8(9)***
여자	5.3	0.6	67.9	1.9	6.0	13.2	5.1	100.0(318)	
연령									
28~29세	8.5	2.1	43.2	1.1	32.4	2.7	10.0	100.0(377)	
30~34세	3.6	0.4	65.1	0.4	20.1	6.1	4.3	100.0(522)	212.7(18)***
35~39세	-	-	74.2	-	9.8	25.9	-	100.0(163)	

주: 1) 기타에는 '형이나 언니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상대자가 있으나 부모님이 반대해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동생애' 등이 포함됨.

* p<.05 ** p<.005 *** p<.001

자료: 〈표 4〉와 동일.

또한 많은 결혼비용과 고액의 주거비용이 미혼남녀의 주요한 결혼 장애요인이 라 하겠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주거비용의 부담과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이 남 자측에 있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미혼남성들이 결혼제도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 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미혼상태에 있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족형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주거비용’과 ‘불안정한 직장’이라고 하겠다. 즉, 부부가 함께 살 거처를 위한 주거비용의 과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직장근로자의 증대 등이 결혼 연기 및 독신자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이에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저리의 주택자금 융자제도인 모기지 론(mortgage loan)이 신혼부부에게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안정된 직 장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비정규직이 증대되고 있고 청년실업이 양산되고 있음은 저출산의 원인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보완과 일자리의 적극적 창출이 요구된다.

2) 결혼가치관의 변화와 초혼연령의 상승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가치관을 조사한 최근자료에 의하면, ‘결혼의 필요 성’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8.8%가 ‘하는 편이 좋다’ 또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는 의견은 3.4%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한 경우는 여자가 37.9%인데 비하여 남자는 16.3%에 불과하였으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한 여자는 11.1%인데 비해 남자는 28.7%나 되었다. 3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였으나 30세 이상 연령 층부터는 감소하여 역 U자 곡선을 나타냈다.

<표 10> 미혼남녀의 특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2003년)

(단위: %, 명)

특성	하지 않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음	하는 편이 좋음	반드시 해야함	생각해 보지 않음/ 모르겠음	계(수)	χ^2 (df.)
전체	3.4	25.7	47.8	21.0	2.1	100.0(4,042)	
성							
남자	3.1	16.3	49.4	28.7	2.5	100.0(2,285)	334.7***
여자	3.6	37.9	45.8	11.1	1.6	100.0(1,756)	(4)
연령							
18~19세	3.8	28.4	46.1	19.5	2.2	100.0(503)	
20~24세	2.7	25.9	47.2	22.7	1.5	100.0(1,546)	128.3***
25~29세	2.0	21.7	50.7	24.0	1.6	100.0(1,181)	(16)
30~34세	4.7	26.5	51.1	13.7	4.0	100.0(619)	
35~39세	11.4	38.4	29.5	17.1	3.6	100.0(193)	

주: * p<.05 ** p<.005 *** p<.001

자료: <표 4>와 동일.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은 교육에 대한 열망, 미혼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그리고 자아성취 욕구의 증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남녀의 초혼연령은 1960년 남자 25.4세, 여자 21.6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에는 남자 29.3세, 여자 26.5세로 40년 동안 남자는 3.9세, 여자는 4.9세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2003년에는 남자 30.1세, 여자 27.3세로 만혼의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⁸⁾

<표 11> 성별 평균 초혼연령(1960~2003년)

(단위: 세)

성	1960 ¹⁾	1970 ¹⁾	1987	1990	2000	2002	2003
남 자	25.4	27.1	27.3	27.8	29.3	29.8	30.1
여 자	21.6	23.3	24.5	24.8	26.5	27.0	27.3

주: 1) 평균 혼인연령임.

자료: 경제기획원, 1960, 197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연도별 자료, <인구동태통계연보>

가족형성을 의미하는 결혼을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기피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초혼연령 상승의 주요 원인임에 틀림없다. 이에 따라 2003년의 연간 혼인건수는 30만 4천 9백건으로 1970년의 29만 5천 1백건보다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조혼인율은 2003년에는 6.3으로 1970년의 약

8) 1960년과 1970년의 통계자료는 초혼연령이 아니라 혼인연령이기 때문에 재혼연령의 영향을 감안한다면 실제 초혼연령의 상승폭은 이보다 더 클 것이다.

70% 미만에 머물렀다.

〈표 12〉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단위: 천 건, 인구 천 명당 건)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혼인건수	295.1	403.0	399.3	334.0	320.1	306.6	304.9
조혼인율	9.2	10.6	9.3	7.0	6.7	6.4	6.3

자료: 통계청, 연도별 자료, 《인구동태통계연보》

3) 질적 측면의 자녀양육 관심증대

Malthus에 의하면, 소득이 증가되면 결혼시기가 빨라지게 되고 출산력이 증가한다. 또한 Becker(1976)는 소득과 출산력간의 관계를 소득에 대한 자녀수의 탄력도 개념으로 파악하였는데, 그는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녀출산행위를 내구소비재의 구매의욕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욕구도 늘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통적인 소비자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출산율은 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증가는 내구재화의 일종인 자녀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소득증대가 출산력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반대 견해를 보였다. 인구변천 이론은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증대 및 도시화 촉진 등이 소가족 규범을 조성하여 인구증가를 억제하게 된다고 한다. 즉, 출산율 변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 교육수준 향상, 소득증대, 보건의료기술 발달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구변천 현상에 의하여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Notestein(1960)에 의하여 처음 주장되었으며, Coale 등 많은 학자에 의하여 보완되었다.

Dusenberry와 Okun은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자녀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제한된 수의 자녀에 대하여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자녀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이 강해진다고 하였다. 이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내구소비재의 양을 증가시키려는 의욕보다는 질을 향상시키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다. 즉, 적은 자녀수를 갖게 되면서 자녀양육의 고급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42.7%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라고 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22.8%, ‘언제까지라도’ 책임져

야 한다는 경우도 6.9%를 보였다.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를 성인기 이후까지로 보는 부모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자녀의 질적 양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사교육비의 상승, 조기유학의 증가 등에서도 엿볼 수 있어 후술하는 자녀양육비 부담증대와 연결된다.

〈표 13〉 미혼남녀의 특성별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한계'

(단위: %, 명)

특성	고졸 까지	대졸 까지	취업 까지	결혼 까지	언제나	기타	계(수)	χ^2 (d.f.)
전체	22.8	42.7	14.1	12.3	6.9	1.2	100.0(3,855)	
성								
남자	21.3	43.7	15.4	11.7	6.5	1.4	100.0(2,194)	17.4***
여자	24.6	41.4	12.5	13.1	7.6	0.8	100.0(1,661)	(5)
연령								
18~19세	20.4	46.5	11.7	11.2	9.1	1.1	100.0(471)	
20~24세	22.6	41.7	13.2	12.3	8.8	1.4	100.0(1,471)	
25~29세	23.3	43.0	14.9	12.5	5.2	1.1	100.0(1,129)	45.4***
30~34세	25.6	39.2	15.6	14.1	4.3	1.2	100.0(589)	(20)
35~39세	18.0	49.2	18.0	9.2	5.6	-	100.0(195)	

주: * p<.05 ** p<.005 *** p<.001

자료: 〈표 4〉와 동일.

4) 자녀양육비 부담증대

전국 4,534가구의 피부양자녀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⁹⁾ 결과에 의하면,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는 132만 1천원으로 가구원 공통비용 중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비의 자녀 관련 비용은 53만 6천원이었고, 자녀만의 비용은 78만 5천원이었다. 또한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액은 233만 5천원이었으며, 따라서 전체 가구소비규모 중 자녀양육비의 비율은 56.6%를 차지하였다.

자녀수 증가에 따라 가구소비지출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여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42.2%이었으나 2명일 경우에는 60.7%, 3명일 때는 69.7%, 그리고 자녀수가 4명 이상일 때는 72.6%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소비지출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가구소득별 가구소비지출 중 자녀양육비가

9) 동 실태조사는 전국 표본의 약 16,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나 자료처리 및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의 조사완료가구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 4,534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전국 대표성을 갖는 통계치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가구의 경우 57.3%로 45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와 비슷한 수준(57.2%)이었으며, 가구소득별로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14〉 가구특성별 평균 자녀양육비

(단위: 가구, 만원.)

가구특성	(분석가구)	가구		자녀양육비			소득대비	소비대비
		소득 (A)	소비 (B)	소계 (C)	공통비용중 자녀료 ¹⁾	자녀 개인비용	자녀양육비 비율 (C/A*100)	자녀양육비 비율 (C/B*100)
전체	(4,524)	285.4	233.5	132.1	53.6	78.5	46.3	56.6
양육대상 자녀수								
1명	(1,588)	257.7	205.9	87.0	35.4	51.6	33.8	42.2
2명	(2,461)	301.6	244.8	148.5	58.9	89.6	49.2	60.7
3명	(428)	296.9	267.7	186.6	74.6	112.0	62.8	69.7
4명 이상	(45)	279.4	264.9	192.4	84.3	108.1	68.9	72.6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694)	93.8	128.8	73.8	27.3	46.5	78.7	57.3
150~250만원 미만	(1,411)	190.8	174.5	98.5	38.2	60.3	51.6	56.4
250~350만원 미만	(1,168)	287.0	231.6	131.0	53.7	77.3	45.6	56.6
350~450만원 미만	(551)	386.8	287.5	161.4	66.0	95.4	41.7	56.1
450만원 이상	(709)	621.7	416.2	237.9	101.8	136.1	38.3	57.2

주: 1) 가족공통경비를 동거가구원수로 나눈 것임.

자료: 〈표 4〉와 동일.

가구의 가장 어려운 경제문제는 기타를 제외할 경우 자녀양육 및 교육비(28.9%)이었으며, 그 다음은 사교육비 문제(27.2%)이었다. 모부자가정은 각각 자녀양육 및 교육비를 지적하였는데, 특히 모자가정의 46.8%나 되어 부자가정(40.7%)에 비해 6.1%포인트나 높았다. 또한 일반가정은 모부자가정과는 달리 사교육비가 가장 어려운 경제적 문제로 나타났다. 자녀가 2~3명일 경우는 사교육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고, 그 외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를 지적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사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의 교육비가 각 가정에 경제적 부담임은 알 수 있다. 즉, 자녀양육 및 교육비와 사교육비를 모두 포함할 경우 모자가정 65.6%, 부자가정 59.3%로 일반가구(58.1%)나 확대가정 및 기타 가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모부자가정의 자녀양육 및 교육이 경제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가구의 가장 어려운 경제적 고통요인

(단위: %, 가구)

가구특성	없음	지녀양육 및 교육비	사교육비	식료품비	공과금	주거비	기타	계(수)
전체	4.8	28.9	27.2	4.6	8.0	9.2	17.3	100.0(4,534)
가구유형								
부모 + 미혼자녀	5.0	28.3	29.8	4.4	7.2	9.5	5.8	100.0(3,445)
부자가정	5.1	40.7	18.6	3.4	6.8	10.2	5.2	100.0(59)
모자가정	5.1	46.8	18.8	5.9	7.5	10.8	5.1	100.0(187)
확대가정	1.6	24.2	21.6	5.5	11.8	7.5	27.8	100.0(660)
기타 가정	5.4	36.5	9.4	3.9	12.2	9.4	13.2	100.0(183)
양육대상 자녀수								
1명	6.1	32.4	11.0	5.7	10.4	11.7	22.7	100.0(1,592)
2명	4.3	25.8	36.0	4.3	7.1	8.1	14.4	100.0(2,466)
3명	3.1	31.8	36.9	2.6	4.2	7.1	14.3	100.0(428)
4명 이상	-	48.9	26.7	4.4	13.3	2.2	4.5	100.0(45)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0.9	35.9	18.2	7.9	11.1	8.8	17.2	100.0(694)
150~250만원 미만	3.3	30.6	24.9	4.8	8.5	11.2	16.7	100.0(1,411)
250~350만원 미만	5.7	28.1	29.5	3.4	7.1	9.0	17.2	100.0(1,168)
350~450만원 미만	5.9	25.6	32.9	4.0	5.5	10.2	15.9	100.0(551)
450만원 이상	9.6	22.4	32.6	3.2	7.8	5.5	18.9	100.0(709)

자료: 〈표 4〉와 동일.

5)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보육서비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음은 아동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가) 보육서비스

먼저 보육서비스를 살펴보면 공급자와 수요자간에는 높은 욕구불일치를 보여준다. 즉, 보육대상아동은 많이 있을지라도 보육시설로 유인하지 못하는 책임이 정부와 보육시설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3년 현재 영유아의 보육수요율은 36.9%로 2002년의 34.1%에 비하여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수의 증가와 보육대상 아동인구의 감소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이다. 아무튼 보

육시설이용율과 추가희망이용율을 감안한 보육충족률은 60.4%에 불과한 수준이며, 추가 보육수요 아동규모는 영아 257,617명, 유아 270,828명으로 전체 528,445명이었다.

〈표 16〉 영유아 보육수요 충족율 및 추가 보육수요(2003년)

(단위: 명)

구분	인구수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이용율 (%)	추가희망 이용율(%)	보육수요율 (%)	보육충족율 (%)	추가보육수요 아동
	A ¹⁾	B ²⁾	C=(B/A)× 100	D ³⁾	E=C+D	(C/E)×100	A×D
전체	3,588,194	800,693	22.3	14.6	36.9	60.4	528,445
영아 (0~2세)	1,717,445	221,414	7.8	15.0	22.8	34.2	257,617
유아 (3~5세)	1,880,749	579,279	30.8	14.4	45.2	68.1	270,828

- 주: 1) A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2002)에 의하여 추정된 것이며, 2003년의 아동은 2002년 대비 영아 64,874명, 유아 56,945명 감소되어 영유아 보육대상인구는 121,819명이 감소됨.
 2) B의 보육시설이용아동수는 2003년 보육이용아동수 833,269명에서 6세 이상 아동 32,576명을 제외함.
 3) D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자료(2002)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의 추가희망이용율을 기초로 한 것임.

나) 출산휴가제도

2003년 현재 출산휴가제도의 시행률은 92.9%로 높았으며, 이용경험률도 72.7%이었다. 그런데 여성근로자가 필요시 출산휴가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자유로운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87.5%가 ‘본인의사 있으면 이용가능’이라고 응답하여 높게 나타났지만 12.5%는 직장 내에서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출산으로 인하여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출산기피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표 17〉 직장특성별 출산휴가제도의 시행률과 이용경험률¹⁾

(단위: %, 명)

구분	시행률	(분석대상)	이용경험률	(분석대상)
전체	92.9	(529)	72.7	(419)

주: 1) 이용경험률은 출산휴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출산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표 4〉와 동일.

〈표 18〉 취업특성별 출산휴가 제도 이용의 자율성 여부¹⁾

(단위: %, 명)

구분	자율적	비자율적	(분석대상)
전체	87.5	12.5	487
전문직·사무직·서비스	93.9	6.1	(346)
기능직·단순노무직	49.3	50.7	(71)

주: 1) 본 분석은 출산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응답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표 4〉와 동일.

다)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의 시행률은 73.5%이었으나 실제 이용경험률은 12.2%로 매우 저조하였다. 이는 회사 내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성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제도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된다(김승권 외, 2003). 우선 직장특성에 따른 시행률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행률은 94.1%이었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시행률은 41.9%로 저조하여 제도시행 여부에 직장유형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과 여직원회가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 시행률이 높아 여성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조합과 여직원회의 역할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제도의 시행률이 매우 높은 공무원의 이용경험률이 11.0%로 저조하였고, 오히려 정부투자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이 22.2%로 높았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과 여직원회의 유무에 따라서도 이용경험률에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이용경험률은 5.2%에 불과하였다.

〈표 19〉 직장특성별 육아휴직제도의 시행률과 이용경험률¹⁾

(단위: %, 명)

구분	시행률	(분석대상)	이용경험률	(분석대상)
전체	73.5	(529)	12.2	(347)
공무원	94.1	(221)	11.0	(200)
정부투자 공공기관	79.4	(107)	22.2	(72)
대기업	66.2	(65)	13.3	(30)
중소기업	41.9	(124)	-	(43)

주: 1) 이용경험률은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출산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표 4〉와 동일.

응답자의 취업특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이용 시의 자율성을 살펴보면, 직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기능직·단순노무직보다는 전문직·사무직·서비스직(81.9%)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81.7%)이, 그리고 총 근속년

수(10년 이상: 84.8%)와 정규직 근속년수(10년 이상: 85.2%)가 많을수록 ‘본인의사 있으면 이용가능’하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따라서 제도접근에 차별적 요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20〉 취업특성별 육아휴직제도 이용의 자율성 여부¹⁾

(단위: %, 명)

구분	본인의사 있으면 이용가능	본인의사 있어도 이용 불가능	(분석대상)
전체	80.5	19.5	(389)
전문직·사무직·서비스	81.9	18.1	(277)
기능직·단순노무직	58.3	41.7	(48)

주: 1) 본 분석은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응답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임.
 자료: 〈표 4〉와 동일.

회사 내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출산경험이 없거나, 휴직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하지 않아서 등 해당 사항이 없는 응답자는 33.1%이었다. 그 외에 개인적 이유가 아닌 직장에서의 이유인 ‘상사 및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13.4%)’와 ‘휴직후 복직에 대한 우려 때문(8.7%)’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과거에는 제도 이용 시의 문제점으로 ‘상사 및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현재는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비율(80.5%)이 높은 것을 보면 과거에 비해 회사 내에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직복귀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많은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제도를 현실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¹⁾

(단위: %, 명)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비율
출산경험이 없어서/휴직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하지 않아서	33.1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 때문에	2.7
휴직후 복직에 대한 우려 때문	8.7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2.1
직장일이 많아서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3.2
상사 및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13.4
주위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3.4
소득이 줄어서	5.2
기타	20.8
계(수)	100.0(298)

주: 1) 본 분석은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자료: 〈표 4〉와 동일.

육아휴직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후 근로조건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11.1%가 제도이용 후 근로조건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화내용으로 '인사상의 불이익'과 '호봉일부 미인정' 등이 제기되었다(김승권 외, 2003).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도가 낮은 원인은 대체인력의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직장동료와의 관계 등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많다. 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 보수지급이 매우 인색하게 이루어져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더군다나 많은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도입할 여유가 없어 근무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성보호제도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공동부담의 방식을 채택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적 분담에 의하여 적절한 보수지급과 대체인력 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직장의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에 대한 장려금 지원, 세계경감대책 등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⁰⁾

6) 여성의 자아육구 및 사회참여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처럼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도 지난 30여 년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여성취업이 산업화 초기에는 대량의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것에 기인되었으며,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 및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충당하기 힘든 자녀교육비의 증가 등에 따른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또는 여성 자신의 개발 및 경력추구 등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취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금전획득능력을 갖게 되고, 가사분담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며, 아울러 출산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기혼부인의 취업은 가족의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산, 양육, 노인층의 부양, 부부간의 관계와 역할 및 권력의 배분 등 가족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10)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기관·기업체에 대하여 강력하게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맞벌이 가정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일정기간의 가사도우미, 농가도우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며, 이는 출산전·후 약 1~2개월 동안 공공근로형태에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가져온다고 하겠다(김승권 외, 2003a).

2004년 1/4분기 현재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4.8%로 과거 약 40년간의 흐름 속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여자의 경우는 49.6%로 산업화 초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2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1963 ¹⁾	1970 ¹⁾	1980 ¹⁾	1990	2000	2001	2002	2004. 1/4.
남자	76.4	77.9	76.4	74.0	74.2	74.2	74.8	74.8
여자	36.3	39.3	42.8	47.0	48.6	49.2	49.7	49.6

주: 1) 1987년 이전 경제활동인구수는 만14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임.

자료: 통계청, 연도별 자료, 《경제활동인구연보》

전체 취업여성 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0~2001년 기간 중 전체 취업여성 중에서 미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8% 포인트 감소한 반면, 기혼여성의 비율은 동일한 수준만큼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여성취업자 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현재 77.8%에 이른다. 특히 전체 취업여성 중 유배우 여성은 65.4%나 되었으며, 가구의 경제생활을 책임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별 및 이혼가정의 기혼여성 취업자가 12.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준의 상승 및 여성의 자아성취욕구 증대와 함께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무관리직과 전문직에의 부인취업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측면의 성역할 모형이 되고 있어 경제적, 정서적, 자녀양육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김승권 외, 2000).

〈표 23〉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구성비(1980~2001년)

(단위: %, 천명)

연도	미혼	기혼				계(수)
		소계	유배우	사별	이혼	
1980	28.0	72.0	59.0	11.6	1.4	100.0(5,222)
1990	24.5	75.5	62.8	11.0	1.7	100.0(7,376)
2000	22.2	77.8	65.5	9.3	3.0	100.0(8,707)
2001	22.2	77.8	65.4		12.4	100.0(8,895)

자료: 통계청, 연도별 자료, 《경제활동인구연보》

7) 자녀효용가치 감소

자녀의 경제적 효용과 비용은 경제발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출산규범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주장하였다. 이는 동태적인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되는 것인데, Leibenstein(1974)은 자녀의 경제적 효용을 소비효용, 생산재 효용, 노후보장효용 등으로 구분하였고, 자녀가 자립할 때까지 투입되는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등의 직접비와 자녀양육으로 인해 상실되는 기혼부인의 활동기회에 대한 기회비용인 간접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녀의 효용 및 비용의 크기는 경제발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자녀효용이 증가하고 비용은 낮아져 많은 자녀를 갖게 되지만 경제발전이 성숙된 단계에서는 소득증대로 인하여 자녀의 효용은 감소되고, 비용은 증대되어 소자녀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Muller와 Mincer(1962)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전자의 경우 전통적 농업중심사회에서는 자녀의 효용이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다자녀 형성의 동기가 되지만 사회발전에 따라 자녀의 효용은 감소되고, 비용은 증가되어 소자녀관 규범이 보편화된다는 견해이며, 후자의 경우는 기혼부인의 소득이 증대되면 출산율은 저하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승권 외, 2002. 재인용).

가족의 재생산 기능 약화로 볼 수 있는 기혼부인 중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태도가 낮아졌다. 즉, 동 비율이 1991년 90.3%에서 1997년 73.7%, 2000년 58.1%, 2003년 54.5%로 점차 저하되었다. 반면에 자녀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은 1991년 8.5%에서 1997년 26.0%, 2000년 41.5%, 2003년 44.9%로 상승되었다. 따라서 기혼부인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1991~2003년)

(단위: %, 명)

년도	반드시 가져야 함	반드시 가질 필요 없음			모르겠음	계
		소계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1991 ¹⁾	90.3	8.5	-	-	1.2	100.0(7,448)
1997 ²⁾	73.7	26.0	16.6	9.4	0.3	100.0(5,409)
2000 ³⁾	58.1	41.5	31.5	10.0	0.4	100.0(6,408)
2003 ⁴⁾	54.5	44.9	32.3	12.6	0.7	100.0(6,614)

주: 1991년은 15~49세 기혼부인을 분석대상이며,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하는지 또는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는 지만을 질문함.

- 자료: 1) 공세권 외 (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조남훈 외 (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 (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 (2003b),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이혼 등 가족해체의 증대

가족해체를 의미하는 이혼이 급증하고 있음은 한국에서 가족변화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가치관의 변화에서 알 수 있다. 부인들의 이혼에 관한 생각은 ‘가급적 또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이 52.8%이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는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부인이 30.2%,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와 ‘이유가 있으면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인은 각각 3.3%와 12.2%로 이혼을 수용하는 부인의 비율은 45.7%나 되었다.

저연령층일수록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비율이 높았고, ‘이유가 있을 경우 하는 편이 좋다’거나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도 높아 20대 이하에서는 63.5~64.3%이며, 30~40대는 40.9~55.1%, 그리고 50대 이상은 23.9~37.1%를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혼은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높아 15~24세 연령층 부인은 34.3%로 낮으나 60~64세 부인은 73.8%나 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이혼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급적 또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표 25〉 15~64세 기혼부인의 특성별 이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특성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함	이유가 있으면 하는 편이 좋음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음	가급적 해서는 안됨	절대로 해서는 안됨	모르겠음	계(수)
전체	3.3	12.2	30.2	38.0	14.8	1.4	100.0(10,598)
연령							
15~24세	6.1	16.4	41.8	28.2	6.1	1.4	100.0(213)
25~29세	4.6	19.8	39.1	28.4	6.5	1.6	100.0(1,225)
30~34세	4.1	14.1	36.9	35.7	8.3	0.8	100.0(1,614)
35~39세	2.9	12.3	32.6	40.4	10.2	1.6	100.0(1,855)
40~44세	3.4	12.5	32.4	38.0	12.4	1.2	100.0(1,727)
45~49세	2.1	11.1	27.7	42.7	15.1	1.3	100.0(1,263)
50~54세	3.2	10.6	23.3	39.1	22.3	1.4	100.0(958)
55~59세	2.8	7.0	18.0	42.0	28.3	1.9	100.0(927)
60~64세	2.1	4.9	16.9	40.9	32.9	2.3	100.0(817)

자료: 김승권 외 (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의 연간 이혼건수는 16만 7천 1백건으로 1970년의 1만 1천 6백건보다 약 14배 증가하였으며, 조이혼율은 3.5로 1970년의 약 9배에 이르렀다. 이혼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가족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와 같은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자녀출산을 망설이게 되고, 이는 출산을 저하와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을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혼가정이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 26〉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단위: 천 건, 인구 천 명당 건)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이혼건수	11.6	23.7	45.7	120.0	135.0	145.3	167.1
조이혼율	0.4	0.6	1.1	2.5	2.8	3.0	3.5

자료: 통계청, 연도별 자료, 《인구동태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1년 실시한 「가족복지욕구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된 우리나라의 가족해체율은 6.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해체율은 부자가정이 0.939%, 모자가정 3.421%, 1인 단독가정 2.190%, 그리고 기타 해체가정의 해체율은 0.21%이었다(김승권 외, 2001).

〈표 27〉 해체가족유형별 가족해체율

(단위: %)

구분	전체 해체가구	부자가정	모자가정	1인 단독가구	기타 해체가정
조사완료 해체가구수	583	81	295	189	18
조사완료해체가구수 대비 가족유형별 조사완료수	-	13.9	50.6	32.4	3.1
가족유형별 가족해체율	6.76	0.939	3.421	2.190	0.21

주: 조사완료 해체가구에 의하여 해체가족의 유형별 해체율을 산출함.

자료: 김승권 외 (2001), 《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술한 해체가족유형별 가족해체율을 활용하여 해체가족유형별 규모를 파악하여 보면, 모자가정이 489.6천 가구로 가장 많고, 미혼단독 및 노인단독가구를 제외한 1인 단독가구는 313.4천 가구, 부자가정 134.4천 가구, 그리고 기타 해체가정은 30.1천 가구이었다. 따라서 전체 해체가정의 규모는 96만 7천 5백 가구로 추정된다.

〈표 28〉 가족해체율에 기초한 해체가족 추정

(단위: 천 가구, %)

구분	전체 일반가구	해체가족				전체 해체가정
		부자가정	모자가정	1인 단독가구	기타 해체가정	
비율 ¹⁾	100.0	0.939	3.421	2.190	0.21	6.76
가구규모 ²⁾ (천가구)	14,312	134.4	489.6	313.4	30.1	967.5
해체가구 구성비	-	13.9	50.6	32.4	3.1	100.0

자료: 1) 김승권 외(2001), 《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통계청(2002) 《장애인구추계》

9) 불임부부의 증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불임률은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배우 가임여성의 불임발생률은 13.5%로 부부 7쌍 중 1쌍은 적극적인 불임치료 대상으로 나타났다. 즉, 불임부부는 1990년 25만 쌍에서 2003년 64만 쌍으로 156%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또한 과거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지원의 영구불임시술을 수용한 부부의 경우에도 추가자녀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 이는 주로 재혼부부의 경우와 기존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복원수술의 비용이 고액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경제적 이유로 추가자녀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

IV. 출산을 변화의 향후 전망

한국사회에서 향후 출산을 변화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는 경기침체 등과 같은 가구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적 측면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가임여성층 인구의 규모변화, 미혼남녀의 자녀출산에 대한 낮은 사회적 가치, 그리고 출산을 회복정책의 한계 등에 의하여 향후 출산을 변화를 전망해 본다.

1. 가임여성층 인구의 규모변화

우리나라 가임여성인구(15~49세)의 연령층별 규모변화를 추정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가임여성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출산율 수준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출생아수가 감소하게 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29> 가임여성층 인구의 연령별 변화추이(2002~2040)

(단위: 천명)

	2002	2010	2020	2030	2040
15~19세	1631.4	1613.4	1179.1	938.9	833.7
20~24세	1945.2	1450.6	1490.1	1019.2	852.7
25~29세	1957.0	1829.9	1592.5	1104.3	927.3
30~34세	2156.3	1848.7	1440.8	1480.8	1013.0
35~39세	2031.6	2108.2	1821.3	1586.1	1159.9
40~44세	2097.3	2049.6	1831.9	1428.7	1468.8
45~49세	1649.8	2063.7	2083.0	1801.5	1569.5
전체	13,468.6	12,964.1	11,438.7	9,359.5	7,824.9

주: 본 변화추이는 2002년의 합계출산율(1.17)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것임.

2. 미혼남녀의 자녀출산에 대한 낮은 사회적 가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약 78.5%가 결혼 후 자녀가 꼭 있어야 하거나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결혼 후 가족생활에 있어서 자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경우는 남자 42.0%인 반면 여자는 31.4%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한 경우는 여자 21.7%인 반면 남자는 17.4% 이었다. 20~24세 응답자의 40.7%가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의견은 30~34세 응답자의 23.3%, 35세 이상 응답자의 29.1%로 나타났다.

〈표 30〉 미혼남녀의 특성별 자녀관

(단위: %, 명)

특성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음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음	꼭 있어야 함	생각해 보지 않았음/ 모르겠음	계(수)	χ^2 (d.f.)
전체	19.3	41.1	37.4	2.2	100.0(4,043)	
성						
남자	17.4	38.3	42.0	2.3	100.0(2,284)	50.0***
여자	21.7	44.8	31.4	2.1	100.0(1,759)	(3)
연령						
18~19세	20.8	45.3	30.9	3.0	100.0(501)	
20~24세	17.6	39.4	40.7	2.3	100.0(1,548)	
25~29세	17.1	41.3	39.3	2.3	100.0(1,182)	45.0***
30~34세	23.3	42.0	33.3	1.4	100.0(619)	(12)
35~39세	29.1	39.8	29.1	2.0	100.0(196)	

주: * p<.05 ** p<.005 *** p<.001

자료: 〈표 4〉와 동일.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미혼남녀의 주요 이유는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결혼 후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여자의 28.4%(남자의 9.0%)가 ‘자녀를 양육할 자신이 없으므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여자가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 부담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사회적 성취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에 대한 응답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의 사회적 성취욕구가 자녀출산 및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31〉 미혼남녀의 특성별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부부 중심의 생활영위를 위해	자녀 양육할 자신이 없어서	자녀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사회적 성취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어서	생각해 보지 않음/ 모르겠음	계(수)	χ^2 (d.f.)
전체	51.5	18.4	6.7	8.2	0.5	14.7	100.0(761)	
성								
남자	62.1	9.0	6.4	7.2	-	15.3	100.0(391)	62.2***
여자	40.3	28.4	7.0	9.2	1.1	14.1	100.0(370)	(5)
연령								
18~19세	41.9	16.2	7.6	13.3	1.0	20.0	100.0(105)	
20~24세	44.4	20.2	5.6	11.9	0.7	17.2	100.0(268)	
25~29세	56.9	18.0	7.7	4.1	1.0	12.3	100.0(195)	43.3**
30~34세	59.7	14.4	9.3	6.5	-	10.1	100.0(139)	(20)
35~39세	63.1	24.6	-	-	-	12.3	100.0(57)	

주: * p<.05 ** p<.005 *** p<.001

자료: 〈표 4〉와 동일.

3. 출산율 회복 정책의 한계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기침체의 지속화와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 및 사회제도 개선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재정적 한계로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민들의 욕구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어 있어 소극적인 정책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향후 출산율 변화를 전망해 보면, 저출산을 일찍 경험한 서구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어 출산율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더군다나 젊은 미혼남녀의 가치관이 개인주의화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산율 회복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수년간 실시된 각종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경기침체가 회복된다면 약 20%의 출산율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의 합계출산율은 약 1.43명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종합적, 체계적 출산회복정책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약 10년 후에는 합계출산율 약 1.6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동 수준은 IMF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의 수준이며, OECD 국가의 평균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 회복수준은 상이할 것

이며, 아울러 한계가 있을 것이다.

V. 결론

우리 사회의 저출산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일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2020년을 전후해서 인구가 절정에 도달하며, 그 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100년의 인구는 약 2161만 명이 될 것이고, 그 후에도 계속 감소하여 사회의 발전 및 존속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보다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는 서구 선진국에서조차도 저출산의 심각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왔음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저출산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출산안정을 도모하고, 파생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지국가의 이념적 논리에 입각하여 저출산 문제는 사회가 책임져야 할 당위성을 가지며, 이에 대한 대책은 국가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타당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국가정책의 개발추진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것은 정책의 목표가 뚜렷해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효율적·효과적이어야 하며, 그리고 전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자녀의 출산은 한 부부의 개인적 행위임은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유엔(UN)의 인구 및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ICPD)의 행동강령(programme of action)에 나타나 있다. 즉, 출산행위가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분명히 사회적 영역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출산회복정책이 당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결혼, 출산, 자녀양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환경,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유도될 수 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출산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회정책이 자녀를 갖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되거나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출산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 통계조사국·가족계획연구원(1977),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
- 공세권 외(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형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0a),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2001), “인구 및 가족정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안”, 《보건복지포럼》 제6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1), 《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3a), 《가정복지 종합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3b),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현상(1988), 《198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서문희 외(2002),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광희(2002), “출산력”, 김두섭·박상태·은기수(편), 《한국의 인구》, 제3장, 통계청.
- 조남훈 외(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해당연도,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 _____, 해당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 _____, 해당연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문식 외(1994),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ecker, G. S. (1976),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Bongaarts, John (2001), "The End of the Fertility Transition in the Developed Worl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3): 419-443.

Cho, Lee-Jay, R. Retherford, and Minja Kim Choe (1986), *The Own Children Method of Fertility Estimation*, Honolulu, Hawaii: East-West Center.

Feeney, Griffith, and Jingyuan Yu (1987), "Period Parity Progression Measures of Fertility in China", *Population Studies* 41(2): 71-102.

Han, Sung-Hyun and Griffith Feeney (1993), "The Emergence of A New Pattern of Childbearing: Fertility in Korea During the 1980s",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16(1): 59-68.

Kitagawa, E. M. (1955), "Components of A Difference Between Two Rat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0: 1168-1194.

Kulkarni, Sumati and Minja Kim Choe (1998), *Wanted and Unwanted Fertility in Selected States of India*, Honolulu, Hawaii: International Institute for Population Sciences and East-West Center.

Leibenstein, Harvey (1964), "An Interpretation of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Promising Path or Blind All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2: 563-585.

Mincer, J. (1962), "Labor-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in H. Lewis (ed.), *Aspects of Labor Econom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Notestein, Frank W. (1960), "Mortality, Fertility, and Size - Age Distribution and the Growth Rate", i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ed.),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s in Developed Count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etherford, R. D. and N. Ogawa (1978), "Decomposition of the Chang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in the Republic of Korea, 1966~1970" , *Social Biology* 25: 115-127.
- Tsuya, Noriko O. and Minja Kim Choe (2003), "Investments in Children's Education, Desired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 in N. O. Tsuya, L. L. Bumpass (eds.), *Marriage, Work, and Family Life in Comparative Perspective: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Academic Press.